

이태원 국정조사 오늘 개문 발차...野 “더는 못 기다려”

예산안 처리 지연에 하세월...국조 활동기간 45일 중 절반 지나 3당, 이번주부터 본격 특위 활동...“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지만,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특위 활동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특위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제대로 된 회의도 열지 못했다.

그간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해왔다.

지난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야당측이 파기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야당 생각으로 보인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1%포인트(p) 인하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여당의 수용 보

류로 어그러진 만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분명하게 여당에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더 늦췄다는 내실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야당 특위 위원들만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소화하려면 남은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열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도 입장을 바꿨다.

우 위원장은 18일 "정 안돼도 15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줄 알았으나 더 기다리기가 어렵게 됐다"며 "상황에 변화가 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어떤 경우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중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홍 의원과 특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시민분향소 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끝내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 야 3당만으로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

이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처리가 지

연된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연장·추가연장근로’ 존폐 기로

내년부터 효력 상실...여야, 예산안 대립에 법안심사 일정도 못잡아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각종 일몰 법안들의 연장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의 법안들이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준으로 일몰까지 불과 14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백락치기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큰 사안은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며 지속 및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다. 현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 재로서는 커보인다.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맞더라도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 방안, 합당한 운임 구조 등을 담아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몰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주 60시간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면서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의 견해차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한 뒤로는 추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예정대로 올해로 끝이 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일몰제에 관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 지 도부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건설사 줄도산 우려...정부, 선제 대책 필요”

이재명 SNS 메시지...“34조원 어음 도래하는 연말 최대 고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따른 '돈맥경화'로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었으나 정부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느장 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한 것”이라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대비해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참사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 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하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